

文 대통령, 내일 윤석열 임명 재가할 듯

보고서 없는 16번째 인사 25일 0시부터 임기 시작할 듯 추경 국회 정국 경색 불가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16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6일날 임명 재가(裁可)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년 임기인 문부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퇴임한 뒤, 25일로 넘어가는 오전 0시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오전 0시부터 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5일 가량의 기간을 부여하며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대통령의 의중도 강하게 반영돼 있어 임명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



하고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준하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유승민 “文, 일본에만 유독 강경...아베 만나 해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다. 냉철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했을 때 대통령이 보여준 저 자세, '오지않아 다행'은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 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다. 중

위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한 판단과 선택"이라며 "경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고, 이 판결 이후 일본과의 협상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직이고 있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아베 미워도...北·中 대하는 태도 절반이라도 보여야”
“국가 이익 위한 판단과 선택 우선해야...협상은 대통령 몫”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일본의 반도제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 대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은 경제가 아닌 국제정치, 외교에서 발생한 경제보복이다.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밟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본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족 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된다"며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수출도 먹고 사는 경제,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경제가 우리 경제다. 이 체질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기술력이 일본을 능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그만큼 취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위원회의의 공개 회의에서 주대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길 잃은 바른미래당 혁신 줄사퇴·폭로에 만신창이

바른미래당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가까스로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처하며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고, 당 쇄신 역시 '시계 제도' 상황에 내몰린 형국이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지난 11일 '계파 갈등이 재연됐다'라며 전격 사퇴한 뒤 김소연, 조용술 혁신위원이 줄출이 사퇴, 사실상 와해 위기에 처했다.

주 위원장은 지도부 재신임을 여론조사에 부친다는 내용이 포함된 1차 혁신안이 의결된 다음날 사퇴했다. 이를 두고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비당권파는 주 전 위원장의 사퇴가 손 대표 퇴진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고,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혁신안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비당권파는 혁신안을 최고위에 상정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고위에서 이미 결된 안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위원장 문제도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등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당권파가 혁신안의 최고위 상정

주 위원장은 지도부 재신임을 여론조사에 부친다는 내용이 포함된 1차 혁신안이 의결된 다음날 사퇴했다. 이를 두고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비당권파는 주 전 위원장의 사퇴가 손 대표 퇴진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고,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혁신안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혁신위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조용술 의원은 당의 한 유력 인사가 손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고 폭로했고, 자리를 지키는 혁신위원들은 오히려 주 전 위원장이 야권 재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계파'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권성주 혁신위원은 혁신위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당을 쇄신하겠다고 출범한 혁신위가 되려 계파 갈등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용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의결된 혁신안이 손 대표 퇴진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추진 작업을 논하는데 각 계파가 맞서고 있어서다.

당권파는 위원장 후임이 선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집행이 힘든데다,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한 판단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올려야 한다며 최고위 상정이 이르라는 입장

이다.
반면 비당권파는 혁신안을 최고위에 상정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고위에서 이미 결된 안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위원장 문제도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등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당권파가 혁신안의 최고위 상정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지 수사나 재판 대상이 아니다"며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는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은 아주 부적절한 대처 방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면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인가"라며 "책임진다고 호인장담을 하면서 의원들을 앞세워 놓고 이제와서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을 요구했으나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 혁신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이미 내분을 일으킨 만큼 혁신의 동력 자체를 얻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조적으로도 혁신위가 계파싸움이 휘말리지 않고 쇄신안을 내놓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혁신위는 계파를 떠나 당의 정책 등을 새롭게 내놓고 인적쇄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바른미래당이 섞이기 힘든 계파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며 "자기 계파가 원하지 않는 차기 혁신위원장이 오면 끝없이 결사투쟁할 것이고 결국 혁신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예상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